

알렉스 캘리니코스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세력화

7면



중동의 위기와 반전 운동

크리스 하먼 - 미군 이라크 증파와 중동 전망 3면

존 리즈 -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전쟁 전략 4면

소말리아, 부시의 또 다른 전쟁터 5면

노동조합 운동

현대차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민주노총 선거

6, 8면

27호 2007년 1월 13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노무현의 개헌 제안은 꼼수다

'꼼수 개발 연구소 소장' 노무현이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되지도 않을 일[개헌]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더니 말이다.

노무현은 개헌 제안에 "어떤 전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했지만,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거짓말의 하나일 뿐이다. 개헌 카드는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꼼수이다.

개헌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돌려, 온갖 배신과 개악이라는 진정된 문제를 흐리고, 집권 여당의 분열을 봉합하고, 개헌을 둘러싼 찬반으로 구도를 변화시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부 NGO와 학계 인사 등에 게 추파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개헌 제안에는 정치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제약 조항(37조2항)

폐지나 냉전적 영토 조항 변경, 토지 공가령 도입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 임기 문제만 바꿀 뿐이다.

노무현은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훼손"하며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한미FTA, 노동법 개악 등 노무현이 중시한 '전략 과제'들은 단임제나 야당의 반대 때문에 가로막힌 적이 없다. 이런 문제에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의 든든한 동맹군이였다. 심지어 극우인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조차 이라크 파병을 "용기 있는 업적"이라고 찬양했다. 열우당이 든 한나라당이든 누가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과제 추진을 중단할 리 없다.

노무현이 레임덕에 빠진 이유도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 이 같은 개악과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진정한 원인이다. 연임제

이지만 재집권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진 조지 부시를 보라.

노무현은 개헌을 하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다가오는 한미FTA 최종 협상, 3월로 예정된 레바논 파병, 개악된 노동법의 산업 현장 적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꼼수 덕분에 노무현은 선도탈당론까지 나오며 극단으로 치닫던 열우당의 분해를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혔다. 갑작스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나선 김근태와 열우당, 민주당까지 개헌 찬성으로 결집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장파의 "성실한 검토" 요구와 함

께 예비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던 노무현의 다음 꼼수로 '임기 단축과 조기 퇴임'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지난 번 꼼수였던 대연정 제안이 오히려 지지층 이반을 심화시켰듯이 이번 꼼수도 제 무덤 파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꼼수의 의도가 너무 명백해서인지, <한겨레> 조사에서도 '현 정권 내 개헌' 지지는 20퍼센트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노무현의 제안에 원칙적으로라도 동조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적 선거 대안 제시로 나아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이다

>> 관련 기사 8면

전국공무원노조 투쟁결의문화제
일시: 2007년 1월 13일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인용해도 될까요?”

“나는 안경 낀 권한도 없냐, 전에 가수 비의 공연을 보니 까만 안경을 쓰고 군복을 입었더라.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봤으면 비도 박정희 같다고 했을 것”

- 이명박

“내 이름이 명치유신의 명, 이등박문의 박을 뺐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허위사실도 떠돈다.”

- 이명박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숨겨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자. 노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빈 말이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

- 한나라당 손학규

“간첩이 간첩들을 변호하는 게 어딴느냐”, “빨갱이 변호사 선임료는 김정일이 내느냐”, “재판은 무슨 재판이나, 모조리 총살시켜라”

- ‘일심회’ 사건 장민호 씨 재판에서 난동을 부린 우익들

“명백한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률’이라며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주인공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이 모든 사태의 총지휘자이자 감독을 맡은 자, 찢어발기고 싶은 이름 석자 노무현과 함께 말이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가끔 가다 한 번은 [섹스를] 해야지! 옛날에는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하더니 ... 조철봉(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주인공이 기가 너무 죽었어. 내가 오늘은 한 번 하나 싶어서 봤더니 안 하고 안 하고 ... 철봉이 아니면 무어냐 말이야? 낙지야, 낙지!”

- 한나라당의 ‘강안’ 재섭

비정규직법

서울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들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지난 연말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며 ‘비정규직도 2년 일하면 정규직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든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입증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법원행정처는 “2007년 7월 1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과 관련해 향후 법원 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 외주용역화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발송했다.

철도공사도 KTX에 이어 새

마을호 여승무원들까지 외주화하기로 했고, 이 결정에 반발하는 승무원 20여 명을 해고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던 전영숙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후 철도공사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외주용역화의 본질을 드러냈다.

“국가 경영 철학”

그러나 철도공사 사장 이철은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중인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철은 “승무 업무 외주화는 국가 경영 철학과 연동돼 있다”며 계속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검찰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현대차에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 기획국장의 주장처럼 검찰 논리대로라면 “어떤 상황도 다 적법도급”이 되며 “파견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관대한’ 해석은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철도공사 사장 이철의 말처럼 “국가 경영 철학”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좌절시키려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에서 비정규 불법파견이 무혐의 처리되고 정규직의 성과급도 공격받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키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강동훈

삼성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시사저널> 노동자들

지난 1월 5일 <시사저널> 노동조합은 편집권을 유리한 경영진에 맞서, 금창태 사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이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시사저널> 편집국이 신기로 결정한 삼성 비판 기사를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시사저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4개월이 넘게 진행된 단체협상에서 사측은 ‘편집권 관련 문제는 단협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무시해 왔다. 그뿐 아니라 노조원들을 부당 징계하고 일부 노조원들에게는 노조 탈퇴를 강요해 왔다.

전략기획실

삼성 전략기획실은 이 기사의 게재를 막으려고 <시사저널>의 기자·편집진과 경영진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했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광고료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한겨레>도 포스코 점거 투쟁을 지원하는 금속노조의 의견광고 중에서 ‘삼성’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게재를 거부한 바 있다.

<시사저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삼성장학생’들이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어떻게 ‘대리 탄압’하는 지도 잘 보여 준다.

이번 사태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이견희 증인 신청을 주류 정당 의원들이 무력화한 것, 이견희 학위 수여 저지 투쟁을 한 고려대 학생들에 대한 사후 보복으로 사상 초유의 ‘출교’ 조치를 한 것, ‘X파일’ 공방 때 MBC가 이상호 기사를 징계하고 내부적으로 ‘보도 불가’ 판정을 내린 것 등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삼성은 언론·국회·대학 등에서 모두 ‘손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저항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있다.

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권까지 침해하는 경영진에 맞선 <시사저널> 노동조합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김중환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 되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14만 원 이상을 교통비로 부담해야 한다. KTX 등 철도요금·시의

고속버스 요금·우편 요금, 경제난 때문에 빈곤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 값, 수도권 지역의 수도세 등도 인상된다.

도덕적 해이

한편,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료도 평균 6~12퍼센트나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엉터리 통계까지 동원해 빈곤층이 “[보험료를 면제해 주니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배나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다”며 보험료 면제를 없애려 한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5백만

명을 비롯해 사회 빈곤층에 의료보험 혜택과 보험료 면제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안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올해 서울대가 내놓은 신입생 19퍼센트 인상안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은 평균 1백만 원이나 뛰어오른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서울대의 뒤를 따를 태세다.

이런 마당에 국회는 교육예산안을 확충하기는커녕 1천7백억 원 삭감했다. 80대 독거 노인이 전기료 몇만 원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끄고 자다가 얼어죽은 지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노인 지원 관련 예산도 6백억 원

이나 줄였다. 그 바람에 독거 노인 도우미 숫자는 2천8백 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2천3백억 원이나 줄이려다가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30억 원 삭감으로 물러서기도 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여론을 주도해 당장 2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아냈다. 이수정 시의원은 “교통요금 인상에 맞선 대중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 삭감에 맞서서도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서범진

이라크

미군 '증파'는 최후의 필사적 도박이다

크리스 하먼

조지 부시의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증강 결정은 훨씬 더 많은 이라크인들을 죽이고 파괴하며 참상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미국을 1970년대 중반 리처드 닉슨을 권좌에서 몰아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다.

부시의 결정은 미국 지배계급을 분열시켰고, 이 때문에 미국 반전 운동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 역력하다. 그리고 부시의 결정은 영국 반전 활동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4주 전에 발표된 '이라크 스테디 그룹' 보고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재앙적 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 보고서는 부시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 하나인 "이라크에서 기존 전략 고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고 경고했다.

비관적

[보고서는 지적한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 점령군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이 때문에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 혼란은 중동 지역의 다른 친미 국가들로 확산돼 "주민의 급진화, 대중운동의 분출, 정권 교체"를 부를 위험이 있다. 미군[이라크 주둔]의 증강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세계 전역의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능력"에 "족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인의 66퍼센트가 정부의 이라크 전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사람들은 미국 주류 정치권의 두 유력자들이었다. 부시 1세 정부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설계한 제임스 베이커와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CIA와

국토안보위원회의 고문단 소속인 리 해밀턴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32년 전 미국이 베트남에서 당한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미군의 일부 고위 장성들이 그 보고서의 비관적인 군사적 전망에 동의했는데도 부시는 애써 그 보고서를 무시했다.

부시는 그런 군장성들을 자신의 심복들로 교체하고, 부통령 디 체니와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이자 네오콘 강경파인 프레드릭 케이션의 병력 증강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테러와의 전쟁'을 아프리카 북동부로 확대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을 지지했다.

심지어 베이커-해밀턴 보고서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이란·시리아와 협상하라고 권하는데도 부시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미국 국방부 고문은 저명하고 탁월한 탐사전문 기자인 시모어 허시에게 "그들[부시 정부]은 이란을 뒤집으면 이라크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판돈을 두 배로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말했다.

부시는 민주당의 소심함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수많은 반전 투표 덕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거의 모두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미군의 즉각 철군을 반대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은 미군 철수를 요구한 사람들을 비난했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이 추가 파병에는 반대하지만 이라크 주둔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제2당이라는 그들의 처지와 잘 맞는다. 다시 말해, 민주당

은 공화당의 특정 정책들을 비판하지만 미국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반대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확고한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시의 계획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병력을 증강했다가 실패하면 패배가 재앙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격화

[1999년 봄] 대(對) 세르비아 전쟁을 주도한 미군 장성 웨슬리 클라크는 부시의 미군 "증파" 때문에 "더 많은 미군이 위험에 빠지고", "미군의 사기가 더 떨어지고",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계급이 분열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을 억압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 다.

미국에서 부시가 처한 곤경 때문에 영국 노동당의 곤경이 더 악화했다. 노동당은 지난 5년 동안 미국 제국주의의 비위를 맞추다가 미국의 계획이 실패하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래서 존 프레스콧[영국 부총리]과 고든 브라운[영국 재무장관]은 사담 후세인 처형 방식을 비난하면서 토니 블레어와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썼다.

전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베이커 보고서를 보며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전쟁을 격화시키려는 부시의 결정을 보며 경악하고 더한층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문제를 둘러싼 사회 상층의 분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 분노가 2월 24일 토요일 런던 거리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로 표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투사들의 새해 인사

[편집자] 탄압으로 구속된 동지들이 2007년 새해를 맞아 '다함께'에 연하장을 보내왔다.



동지들의 의견은 감옥에서의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확 풀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

자본의 거센 도전에 맞불을 놓아 불길을 잡고 노동자·민중의 해방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대구교도소에서
이지경 전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전쟁의 시대, 빈곤의 세계화를 타파해야 하는 것은 운동가의 본성적 임무입니다.

개량을 반대하고 철저한 반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요청입니다.

새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 '일심회' 마녀사냥으로
구속된 최기영 동지



동지들 덕택에 전 세계 민중의 반전·반세계화 투쟁의 소식을 접하며 0.9평 독방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 노동해방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어깨 결고 나아갈 것입니다.

- 최근 출소한 김용직 민주노총 총
북본부 조직부장

※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의 전쟁 전략

존 리즈(영국 전쟁저지연합 공동 소집자)가 반전 운동이 2007년에 직면한 과제에 대해 말한다

중동에서 제국주의 프로젝트는 타격을 입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2002년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벌어진 저항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저항만으로는 조지 부시와 토니 블러어 정부에게 이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없었을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그들의 '식민지들'에서의 살상과 파괴가 자국 내의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희생이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국제 반전 운동이 저항의 압력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정부들을 겨냥한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시켰다.

오늘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30년도 더 전인 베트남 전쟁 말엽에 그들의 전임 정부들이 빠진 것과 비슷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패퇴시킬 수 없는 현지의 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고조되는 국내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유럽 대륙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두 주요 지지자였던 스페인의 호세마리아 아스나르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전쟁의 여파로 선거에서 패배했다.

블러어는 자신이 옳게 조기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여름 그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을 지지한 것에 대한 반대의 직접적 결과다.

부시는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참패함으로써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패배에 이어 제임스 베이커가 작성한 '이라크 스테디 그룹'의 보고서는 미국의 최고위 외교 책임자들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라크 정령이 터는 유지될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줬다.

2007년에 결정될 문제는 부시가 모종의 철군을 향해 나아가길 것인가 아니면 지미 캐그니(범죄 영화에서 보여준 '터프한' 이미지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식의 무력을 사용한 위기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든 거기에 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따른다.

만약 그가 워싱턴의 책사들이

업무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

저항 세력의 매복 공격을 받은 미군 병사들 — 미군은 이길 수 없는 게릴라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다

철군"을 택한다면, 적어도 당장의 정치적 손실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터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이라크인들 스스로 갈수록 약화하는 이라크의 재앙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물론 그에 대한 비난도 함께 떠맡게 될 것이다.)

중파

게다가 부시는 시리아·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동에 급진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면, 부시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아랍의 독자 정부 친구들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주둔 미군 "감

축"은 — 어떤 식으로 돌려 말한 다 해도 — 미국 제국주의의 엄청난 패배로 비칠 것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 그제 반전 운동이건, 아랍 세계의 저항 운동이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이건 간에 — 미국을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

제2의 베트남 후유증, 아니 더 깊고 잠재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후유증이 미국 지배계급과 그들의 국제 동맹 세력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걸려 있는 판돈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베이커 보고서(이라크 스테디 그룹의 보고서)의 "대안 전략"과 여전히 일정한 거

리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부시와 블러어 — 둘 모두 터는 치러야 할 선거가 없다 — 가 또 다른 군사적 해결 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조짐들이 있다. 부시가 추가 파병 — 아마도 3만 명에서 4만 명 규모의 — 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것은 현재 이라크 주둔 병력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현지 사령관들은 (또 한 차례의) 바드다드 탈환 작전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해결책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점령군의 규모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점령군으로 이라크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그러한 해결책은 이제 몇 미국이 점령 정당화에 이용해 온 폭두각시 정부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적인 대(對)게릴라 전쟁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군사적 해결책은 시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는 것은 더 어렵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겪은 일이나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일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부시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안들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 또는 이런 방안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 —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여전히 국제 정치와 영국 정치의 핵심일 것이고, 블러어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 운동이 영국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최근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은 미국과 영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직접적 결과이다. 이 침공은 전쟁과 기아로 거듭 분열해온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에티오피아 지배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조지 부시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개시했다. 첫째, 자신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둘째, 억압적 정권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피하기. 셋째,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 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소말리아는 아덴만(灣)을 사이에 두고 예멘·사우디아라비아와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의 이슬람 의용군이 패배했지만 에티오피아와 미국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확실히 부시는 불안해하고 있다. 부시는 이미 전화로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를 설득해 소말리아에 군대를 보내도록 하는 등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케냐 군대도 대기중이다.

지난해 이슬람범정연합(UIC) 의용군이 소말리아 대부분 지역을 점수한 것이 침공의 배경이었다. 의용군은 15년 동안 소말리아 정치를 지배한 군벌들을 몰아냈다.

UIC의 승리는 대중의 진정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은 군벌 통치 시절의 폭력과 야만에 신물이 나 있었다. 게다가 소말리아 씨족 사회의 몇몇 핵심 지도자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UIC를 지원할 태세가 돼 있었다.

UIC의 승리는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대리인 구실을 하려는 군벌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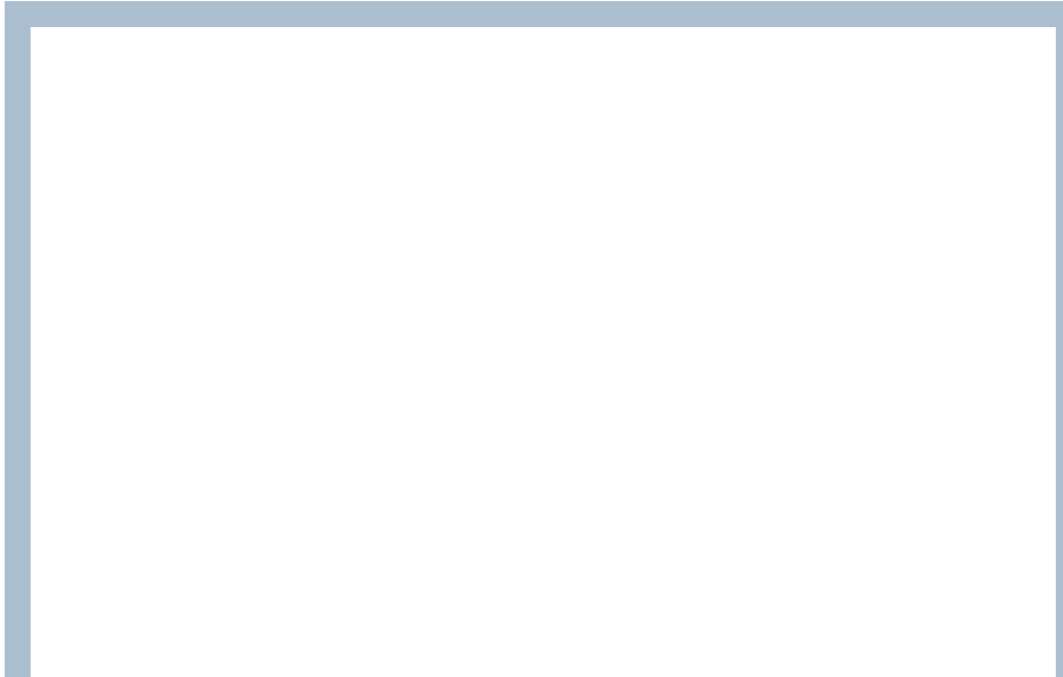
이 군벌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영향력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이들이 끔찍한 학살의 전력을 갖고 있고 소말리아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란 사실은 미국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점령

UIC의 점령은 또한 오랜 평화 협상 끝에 2004년 케냐에서 구성된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었다. '과도정부'는 이름뿐인 정부였다.

심지어 BBC는 이렇게 보도했다. "군벌 출신으로 구성된 암달라히 유수프 정부는 나라 전체는 고사하고 정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유수프 정부는 어디에 근거지를 들지 말다툼하며 첫 18개월을 허비했다. 결국에는 위협 지역으로 여겨지는 수도 모가디슈 대신 에바이도아 지역을 선택했다."

미국과 과도정부는 UIC를 분쇄하기로 마음 먹고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 군대의 소말리아 점령에 항의하는 소말리아 여성들의 시위

에티오피아가 부시의 제국주의 십자군 원정에 동참하다

최근 에티오피아 군대의 소말리아 점령에 항의하는 소말리아 대중의 시위가 있었고, 경찰의 발표로 1명이 숨졌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소말리아 인군에 해군을 배치해 에티오피아 군대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군은 "알카에다 기지를 공격"한다며 폭격기와 헬기를 동원해 소말리아를 폭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혼 부부를 비롯해 수십 명이 죽었다. 영국의 좌파 저널리스트 찰리 킴버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 뒤에 있는 서방 제국주의의 '검은 손을 폭로하고 점령군이 에티오피아인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다.

멜레스 제나위 정부를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멜레스는 오랫동안 서방 지배자들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토니 블러어의 '2005 아프리카 위원회'의 일원이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신자유주의화를 지지한다.

에티오피아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의지의 동맹'의 일부다.(아프리카에서 '의지의 동맹'에 속한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둘 뿐이다.)

아프리카의 억압적 정부에 대한 서방의 비난 속에서 기묘하게도 멜레스의 범죄는 너그럽게 넘어갔다.

2005년 선거 당시 학생과 노동자 시위를 공격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권을 억압한 것 등은 영국과 미국에게 사소한 책망을 받았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후원했던 지난해 7월, 멜레스는 소말리아 접경 지역을 가로질러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봤다. 그 뒤 에티오피아 군대는

전면 공격 가능성을 시험해 왔다. 12월 25일에 멜레스는 수천 명의 군대와 대포, 탱크, 전투기 등을 동원한 전면 공격을 명령했다. 12월 26일에 부시 정부는 에티오피아가 "진정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침략을 지지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무드무데, 다이누아, 이달레, 반디라들리 등지에서 소말리아 청년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소련·이스라엘의 원조 덕분에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한 에티오피아는 군사 작전에서 매년 승리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수도인 모가디슈와 UIC의 근거지인 키스마요를 점령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UIC 전사들이 탱크와 전투기에 직접 맞설 수는 없지만,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처럼 비정규군인 저항세력도 인기 없는 점령자들에게 맞서 매우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새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권좌에 복귀할 군벌들은 대중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세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에티오피아의 확장주의에 정신호를 보내면서 멜레스가 에리트리아에 압력을 더 가할 수도 있다.(지난해 두 국가는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간 바 있다.)

정부

만일 소말리아인들이 새 정부에 맞서 강력한 저항에 나선다면, 새 정부는 이들과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이고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에티오피아 침략군이 모가디슈에서 맨 먼저 점령한 지역 중에는 전(前) 미 대사관 공관이 있다. 미국은 1993년에 소말리아에서 쫓겨났다. 당시 미군은 유엔의 지지를 등에 업고 빈곤과 폭력을 끝내내겠다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했다.

처음에 많은 소말리아인들은 미국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과 UN의 미국 동맹들은 거리 시위대들을 향해 발표했고 고문과 살인을 여러 번 저지른 것이 폭로됐다.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미국은 쫓겨났다.

평범한 아프리카인들의 이익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열망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미군 군사전략가들은 현재 1천8백 명의 미군이 주둔중인 자부티 기지가 미 기동군이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데 필요한 '수련 및 기지'[대규모 거점 기지 외에 전력(戰力) 투사의 발판이 되는 중소 규모의 기지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랐다.

소말리아의 자원들은 끔찍한 빈곤과 심각한 홍수 피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무기와 전쟁으로 낭비되고 있다.

2월 24일 반전 시위(영국에서 '전쟁저지연합'과 '핵무장해제운동(CND)' 주최로 열린)대는 단지핵 미사일과 이라크 점령병 아니라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동부 같은 지역을 황폐화하는 것에도 반대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 반대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전쟁저지연합은 '즉각 철군'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지금 점령군의 구실은 자신의 군사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자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더한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다.

예컨대, 사담 후세인 처형을 보자. 미국은 후세인 처형이 미국에 대한 시아파의 반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수니파를 더욱 격노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미군보다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할 것

이라는 점뿐이다.

영국에서 전쟁 비용은 여전히 반전 여론의 근본적 정점 가운데 하나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교체 비용이 더해지면서 반전 여론은 더욱 커졌다.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트라이던트 미사일 문제는 이라크 점령 문제보다는 정부에 반대하기에 더 쉬운 문제다. 두 정점의 결합은 오는 2월 24일에 벌어질 시위에서 반전 운동의 위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게다가 신노동당 정부가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주요 명분들이 파탄날수록 그들은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

다.

이것은 명백하다. 정부가 내세운 전쟁의 세 가지 주요 명분은 사담 후세인에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고, 서방이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수 있고, 무슬림과 서구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주장은 널리 신용을 잃었다. 그래서 블러어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담론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이슬람이 전 세계에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낳고 있다는 주장은 갈수록 '테러와의 전쟁'의 유일한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전쟁 지지자들이 주장하듯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종교 때문에 너무나 야만적이고 맹목적이게 된 나머지 무력을 써서라도 교정해야 한다면, 서방 세계에 있는 그들의 동료 무슬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실 패한 외교 정책의 국내 회생양이 될 것이다.

2007년 들어 전쟁저지연합의 세 가지 창립 목표 — '테러와의 전쟁' 반대, 인종차별적 공격 반대, 시민권 방어 — 가 2001년 9월(9·11 사건을 말함)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논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1월 26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선출될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세 정파인 '국민파'(범자민통), '중앙파'(전진), '현장파'(노동자의 힘 등)가 모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를 내어 3파전으로 전개된다.

기호 1번은 "당당한 민주노총 다시 세웁시다"를 내건 '중앙파' 양경규·김창근 후보조(이하 양경규 선본)이다. 기호 2번은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 재정립"을 내건 '국민파' 이석행·이용식 후보조(이하 이석행 선본)이다. 기호 3번은 "무기력을 끝장내고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를 내건 '현장파' 조희주·임두혁 후보조(이하 조희주 선본)이다.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국민파'는 상대적 우파, '현장파'는 상대적 좌파, '중앙파'는 그 중간으로 구분돼 왔다. 그 동안 '현장파'와 '중앙파'는 함께 '범좌파' 선거 연합을 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파'와 '현장파'의 '범좌파 연합'이 무산됐다. 아마도 '사회연대전략' 등으로 대표되는 '중앙파'의 우경화가 걸림돌이 된 듯하다.

'중앙파'인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전진'이 지지하는 '사회연대전략'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노동자 책임론·양보론과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대안이다. 그러나 양경규 선본은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지지와 비판 "둘 다 일리가 있고"… 안 된다. 된다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연말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의 부적절한 대처와 이에 '중앙파'가 침묵한 것도 '범좌

파' 연합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인 듯하다. '중앙파'로 분류되는 단병호 의원은 노사관계로드맵 처리를 방조했고, '전진'은 이에 침묵하고 있다.

'중앙파'의 이런 개량주의적 입장 때문에 '현장파'는 무원칙한 선거 연합을 중단한 듯하다.

선거 초기이지만 이밖에도 몇 가지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사회적 교섭' 문제다. '국민파'인 이석행 선본은 이수호·조준호 집행부가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 건설보다는 사회적 교섭에 연연했던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

투쟁 건설을 소홀히 한 조준호 집행부는 결국 노동법 개악에도 무기력하게 대처했다. 게다가 조준호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KBS 토론에서도 "산별노조 체제에 걸맞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파업 없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이

'사회연대전략' 비판 등 좌파적 주장을 펴고 있는 조희주 후보

석행 후보도 "교섭도 투쟁이다"며 사실상 교섭 중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양경규 선본은 사회적 교섭을 비판했지만 "사안별·현안별 중층적 교섭 구조"라는 엇비슷한 주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파' 지도자들은 '국민파'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추진을 묵인해 왔다.

반면, 조희주 선본은 "사회적 합의를 폐기"를 분명히 주장하며, 사회연대전략도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희주 선본의 주장에서 반전 등 정치 쟁점 언급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분명한 좌파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조희주 선본은 현장 노동자 투사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맛볼> 증명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세력화로서 급진 좌파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 정세의 주요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선 대중 저항의 발전이다. 이 점은 특히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제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 수렁이다. 대중적 저항 운동들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운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유럽의 상황은 훨씬 불균등하다. 재계·정계·언론계의 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지지하는 데서 한통속이다. 이 점은 사회적 자유주의 현상—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들이 시장에 굴복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지난해 3~4월 프랑스 학생들의 반란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좌절시킬 대중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중운동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산물이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한다.

1999년 11월 시애틀 시위 이래로 운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다.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는 저항 운동이 정치나 정당과 거리를 뒀다. 한다는 믿음이 득세했다.(프랑스 맑스주의자 다니엘 벤사이드는 이것을 '사회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이런 입장의 근저에는 국가 권력을 향한 투쟁이 모종의 스탈린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놓여 있었다. 많은 활동가들은 존 홀러웨이가 제기한 "권력을 잡지 않고 세계를 바꾸자"라는 구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믿

음이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 저항 운동은 당연히 정치의 장(場)에 들어가야 마련이고 운동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점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선두 주자인 운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가 권력 문제를 제기했다.

베네수엘라의 대중운동은 우고 차베스의 개량주의 정부를 지지하며 발전했다. 볼리비아의 대중운동은 에보 모랄레스를 권좌에 올려놓고 그가 석유·천연가스 산업을 국유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강제했다.

물론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두 나라의 국가는 모두 자본주의 국가다. 궁극적으로 운동은 자신의 민중권력을 발전시켜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은 패배할 것이다.

2006년 3월 프랑스 반CPE 투쟁 — 이런 강력한 운동이 정치세력화로 연결돼야 한다

운동이 라틴아메리카만큼 멀리 나아가지 않은 유럽에서 정치 문제는 운동과 정당의 관계 문제로 제기됐다.

몇몇 나라에서는 운동의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좌파 단체들이 등장했다. 영국의 리스펙트,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독일의 새 좌파당이 대표적이다. 2001~2004년에 운동이 최고조에 이른 이탈리아에서는 현존 좌파 정당인 재건공산당이 운동과 완전히 일체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는 새로운 좌파 정당들의 정치와 관계 있다.

운동과 정당

이 문제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은 이탈리아다. 재건공산당 사무총장 파우스토 베르티노티의 모호한 혁명적 미사여구와 당의 실천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었다.

재건공산당이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연합정부에 참가하고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 파병에 동참하면서 이 간극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재건공산당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반전 운동(이탈리아 반전 운동)을 말함에 미친 영향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다.

라틴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경험은 '혁명인가 개량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현실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기에 두번째 문제가 있다.

일부 극좌파는 개량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차이를 이용해 새로운 좌파 정당 건설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독일에서 종파주의 조직들이 새 좌파당의 일부가 베를린의 사회적 자유주의 연립정부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며 신생 정당을 유산시키려 한 사례는 가장 극단적인 것이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가 보여주듯이, 프랑스는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례다. 결국, 극좌파의 분열 때문에 올 봄 대선은 두 명의 우파 포퓰리스트 후보가 선거를 주도하게 됐다.

이 두 문제의 배후에 똑같이 놓여 있는 것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후퇴한 광범한 대중 정당이나 아니면 협소한 혁명적 조직이나 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시애틀 투쟁 이래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태도는 이러한 사이비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혁명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과거에 노동당이나 그 밖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 대중 상당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사회민주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새로운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혁명인가 개량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정치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독립적인 맑스주의적 분석과 전략을 위해 분투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리스펙트인가 사회주의노동자당인가' 하고 묻지 않는다.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성장·강화는 리스펙트의 성장·강화이기도 하다.

유럽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화 논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1월 14일(일)까지 투쟁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counterfire.or.kr

동덕여대 학생운동가들이 학생운동이 갈 길을 보여 준다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가 원천 무효화됐다. 동덕여대 당국은 총학생회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했었고, 이에 항의해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 6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백37

일 동안 총장실을 점거하며 싸웠고, 교수노조와 직원노조도 이에 연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총장·부총장을 차례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총장 손봉호는 '부정선거' 조작과 학생징계 문제로 해임됐고,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총장직무대

행(부총장) 김병일도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서 6백만 원 상당을 우파 선분에 지원한 견적서가 폭로돼 해임됐다. 이사장은 총장 손봉호를 비호하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선임된 총장직무대행 홍성암 교수는 12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

이었고 징계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쟁의 결과로 등록금 인상률도 3퍼센트 인하됐고 민주 단체들 간의 연대는 더욱 강화됐다. 교수노조 동덕여대 지회가 결성됐으며, 학교를 옹호한 교수협의회는 탈퇴자가 속출했다.

한편, 손봉호는 총장 해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소

청심사를 냈다. 교육부는 손봉호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해임하겠다는 자세다.

항공대·동덕여대 총장 퇴진과 학생 징계 철회, 고려대 어운대의 총장 낙마에서 보듯이 학생운동을 탄압한 자들의 결말은 참담했다. 동덕여대 학생운동가들은 단호하고 끈질기게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안형우

■ **논설**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요구 투쟁을 두고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무식 때의 사소한 충돌을 과장해 '폭력 노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비난하는 '개떼'들 속에 합세한 열우당 김근태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노조"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에 있다. 조합원 1인당 무려 1백만 원 가량을 떼었다. 현대차 정규직뿐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성과급을 떼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난 연말부터 산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시무식을 무산시킨 것이다.

사측은 생산 목표를 98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한다.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노조가 꾸준히 참가'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순이익을 남겼다. 변호사비만 4백억 원을 쓰고 풀려난 비리범 정몽구는 여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사장·부사장은 스톡옵션으로 2억~7억 원의 성과급을 챙기면서도 산업·특근하며 고생해 온 노동자들의 성과급은 떼먹은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맞선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한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반대하는 데 동참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무릅쓰고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했다. 강력한 전면파업이 아니라 미온적 부분파업에 그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 등을 막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노조 지도부가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중도 사퇴하게 된 틈을 타서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허물려고 한다.

선봉부대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저들의 공격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의 강경 투쟁] 수만 명의 동료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을 찬바람 속에 길거리로 내몰고 말리라"며 이간질을 했다.

그러나 IMF 위기도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이 아니었고,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도 노조의 정치 파업 때문이 결코 아니다.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스런 과당 경쟁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럴 때, 노조가 힘이 없고 양보나 한다면 정말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IMF 경제 위기 초기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측은 지금 현대차노조 간부 22명을 고소했고 26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한다면 사측은 더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으려 할 것이다. 다른 기업주들도 현대차의

사례를 따를 것이다.

최근 검찰도 공세에 가세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위장 도급을 통한 무제한적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착취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현대차에서부터 이런 공격을 분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기업주들은 공격을 주춤거릴 것이고,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갖고 공격에 맞설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도부가 연대 투쟁이 아니라 '중재'에 나선 것은 유감천만이다. 사측 비난과 함께 '시무식 충돌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현대차노조에 요구한 것도 잘못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를 허물

리는 공격에 맞서 현대차노조의 투쟁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현대차노조의 산업·특근 거부는 단호하게 계속돼야 하고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 성과급을 삭감당한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무혐의 판정에 대한 항의도 결함될 필요가 있다.

산업·특근 거부로 수백억 원 손실을 봤다 해서 구두쇠 짓을 하는 사측에 노동자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 수십 년 간 투쟁으로 단련된 민주노총 '선봉부대'가 2007년 벽두를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전지운(대표 집행)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노무현 정부가 곧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확정·발표할 듯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뒤로 미루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긴장을 늦춘 다음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처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며 개악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됐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악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개악되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라는 것은 본래 국가가 평생 일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 이번 정부안의 골자는 기여금(보험료)을 높이고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퇴직금을 사기업 노동자들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마지막 3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번 정부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평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재직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큼니다. 2000

걸 적립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일반 보험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개악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전초전이고, 공무원노조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악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 투쟁의 주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라는 조직으로 단결해 있고, 이런 점에서 당장 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